

사료의 부가가치세 고수는 대선공약 위배

UR협상은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그로 인한 우리 농촌과 농민은 존립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기에 농민의 울분은 UR 국회비준 거부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근간 농정개혁, 농촌지원대책이 매스컴을 통하여 떠돌고 있으나 이는 실로 빛좋은 개살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농민의 숙원이자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파기시키고 영세농민들에게 기어코 받아내서 일부 극소수의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발상은 국제경쟁력 제고 이전에 정부당국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마다 생업의 피나는 노력을 함에 있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하며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농정개혁은 초기부터가 떡 나눠주고 고물 챙긴다는 구태의연한 사고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사고방식을 하루속히 청산하여 약자도 땀흘리면 땀의 댓가를 맛볼 수 있는 농촌사회 풍토를 만드는 정책을 실현하지 않는 한 현정권은 농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

이에 전국 축산농민은 다시금 천명하노니 가장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료와 동물약품의 부가세를 철폐시켜 양축가의 숙원을 실현시키는 길만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상호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4. 6. 22

(사)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강성원
 (사)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
 (사)대한양계협회 회장 최준구